

‘동물 국회’ 무더기 고소고발, 총선 변수로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이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동물 국회’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장 붕괴, 기물 파손, 격렬한 몸싸움 등으로 빛어진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물으며 상대 당 의원을 고발, 1일 기준 여야 간 67명이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을 비롯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 봉쇄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성태·김태흠·김학용·김현아·민경욱·박성중·송언석·신보라·안상수·원유철·윤상현·이만희·이은재·이종우·이주영·장제원·전희경·정양석·정유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주관덕·최연혜·홍철호 등 29명이 고발대상이 됐다. 이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종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2차 고발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 등 의원

민주·정의-한국당 간 총 67명 고소고발 명단 올라

선진화법 위반시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친고죄 아니라 정치적 합의로 취하해도 처벌 대상

與, 한국당 원내 복귀 위해 3차 고발엔 신중 입장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고발과 같은 이유에서도다.

피고발된 의원은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순례·김정재·김진태·김용태·나경원·민경욱·박태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원유철·여상규·윤상직·윤재욱·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욱·조경태·최연혜 등 총 39명이다. 이중 19명은 민주당 고발대상과 중복된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지난 27일 지당 의원 및 보좌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범계·백혜련·송기현·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등 15명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 포함 총 17명을 고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이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들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징역형 선고 받고 형을 집행받지 않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입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무더기 고소고발전의 처벌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특히 공직선 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벌금형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들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징

역형 선고 받고 형을 집행받지 않



기로 한 시점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의 경우 소를 취하한다는 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여야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렵게 만들어졌고 지난 7년 간 이번과 같은 무질서하고 불법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만

큼은 분명하게 선진화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 한국당이 고발한 거에 대해 제가 먼저 조사를 받겠다. 한국당도 스스로 자진해서 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고소·고발건을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당장 5월 국회부터 강원 신불·미세먼지·포항 지진 등 지원이 포함된 추경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 처리 논의에 한국당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체 재정 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까지 결론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3차 고발에 관한 기자

들 질문에 “고발은 예상이 있을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할 게 아니라”라고 답했다.

는 20만명, 업체는 8000개가 넘는 등 대리운전 시장은 무척 커졌지만 법적 제도적 정착이 없다보니 소비자나 대리기사, 업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1년차리는 이진선씨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이뤄져야하는데 대리기사가 너무 많다보니 요금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일은 있는데 수수료와 보험료만 나가서 화도 난다”고 전했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급속하게 달라지는 고용 질서를 현행 법 체계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기에 새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손학규 대표, 지명직 최고 위원 주승용·문병호 임명
당 내분 추스리고 기강 대접을 듯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승용 의원(현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현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22조와 23조에 의거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했다”며 “하루 빨리 최고 위원회 당무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여수시장 등을 역임하고 지역구에서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으로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국민의당계 의원 중 ‘고참’에 속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인천부평갑 재선을 지냈고 국민의당 시절 최고위원과 흥보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원외위원장들과 원만한 소통으로 앞으로 당의 화합과 공천 준비에 역할을 발휘해줄 것으로 손 대표는 기대했다.

이 같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의 ‘보이콧’으로 인한 당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및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까지 지도부 총사퇴문에 가세해 손 대표의 리더십과 입지를 훼둘리는 상황에서 현 지도부를 신뢰하고 있는 인사들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 내부에 따른 혼란을 추스리고 기강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손 대표는 “그동안 제가 최고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외연을 넓히고 새 인재 영입과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라며 “그러나 최고위원 세 분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당무가 한 달 동안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당무 집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성공적으로 아틀었다”며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 신봉장으로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 단합된 모습으로 한국정치의 새 판을 짜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의 조속한 당무 복귀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손 대표는 “당 화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당무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근로자의 날’ 대리기사 만난 평화당 “노동 기본권 보장 최선”

국민경청 최고위 열어…대리운전 종사자 고충 청취



민주평화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 기사들과 만나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일선 대리운전 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 했다.

장병원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날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장병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이라며 “이 자리에 오신 대리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열악한 조건에서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종용 회장은 “전국에 대리기사

는 20만명, 업체는 8000개가 넘는 등 대리운전 시장은 무척 커졌지만 법적 제도적 정착이 없다보니 소비자나 대리기사, 업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1년차리는 이진선씨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이뤄져야하는데 대리기사가 너무 많다보니 요금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일은 있는데 수수료와 보험료만 나가서 화도 난다”고 전했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급속하게 달라지는 고용 질서를 현행 법 체계만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기에 새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의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TogeTther Gwangsan

